

올해는 科學기술時代



李 殷 雄
 〈학술원회원/피총감사〉

文民정부에의 기대

바야흐로 계유(癸酉) 문민정권의 출범년이 곧 과학기술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인가? 자못 기대되는 바 크다. 이것은 비단 5백만 과학기술인의 기대만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지난 대선(大選)기간중 공약으로 제시된 과학기술 정책과 교육에의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 분명히 수치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근거(根基)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는 한 나라의 국력 또는 경제력이 그 나라 과학기술 수준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과학기술민주주의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정계와 경제계에서도 국가발전에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인식되고 특히 통치권자의 의중에 부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2000년대의 진입과 더불어 과학기술능력을 서방선진7개

국(G7)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학기술 선진국 그것은 소수의 고급두뇌에 의존하여 반도체, 컴퓨터등 소위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GNP를 일시적으로 크게 높이려는 것보다는 과학과 기술의 보편화와 일반대중화를 과학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며, 온 국민생활이 과학화되고 아울러 과학과 기술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학기술계의 구심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66년에 창립된 과총은 국내의 한국과학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과학기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자의 자질과 지위향상을 기함으로써 회원단체를 육성하며 국민과학화운동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각종사업들을 활발히 수행해 가고 있다. 특히 1968년에는 본 월간 「과학과 기술」을 창간하여 현재 288호를 거듭해 오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에 의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견이 수천편 논술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과감한 연구비 지원을

과학기술계 여러 인사들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대한 주장을 최근 발간된 「과학과 기술」지 3년분에 게재된 권두시론을 통해 종합해보면 한결같이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자는 주장과 아울러 「기술개발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는 등이 캐치프레이즈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떻든간에 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식자들의 제언을 의견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제언의 빈도가 가장 높은 의견은 투자의 촉진을 강조한 것으로 40회중 38회로 95%를 차지했다. 투자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로 구별되었으나 대부분은

元年으로 記錄되기를...

정부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논제의 예를 들면 △과학 기술투자에 달려 있다 △연구의 대폭적인 지원이 관건 △과학 기술투자순위 높일 때 △연구비의 과감한 증액 등이다.

둘째는 과학교육을 강조한 제언이며 그 빈도는 40회중 36회로 90% 수준을 보였다. 논제의 예를 들면 △과학교육자를 위한 제언 △꿈나무 과학도를 기릅시다 △기술의 씨앗을 뿌리자 △과학교육 이래서야 △과학교육비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과학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과학기술교육의 개혁이 급선무 △과학교육혁신과 투자절실 △과학교육센터를 설립하자는 등등이다.

국민 科學化운동 절실

셋째로는 과학기술풍토의 조성을 강조한 제언이며 40회중 34회로 85%를 나타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창조와 과학정신이 국민의식속에 정착되는 온국민 과학화운동이 전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말기사회가 실과를 천시하는 구교육 그리고 실과교육을 받는 자는 중인계급자제들뿐이고 그들은 제아무리 훌륭한 기술자라고 할지라도 양반 7.8품의 벼슬자리 이상 오를 수 없었다. 사회풍조가 그랬고 국책이 그러했으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고 따라서 산업이 번창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계는 당파싸움으로 국사가 문란해지고 국민경제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되어 국력이 쇠퇴하고 급기야는 일본식민지로 전락되는 치욕의 역사를 상기하였다. 과학기술풍토조성을 위한 논제의 예를 들면 △과학의 대중화운동 △전국민 과학화운동의 전개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국민의식의 배양 등이다.

넷째는 통치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제언이며 그의 빈도는 40회중 34회로서 85%를 보였다. 즉 과학기술진흥정책은 보다 강도 높게 범국책(汎國策)으로 다루어져야하며 과학기술의 성쇠는 통치자의 결단에 좌우된다는 제언이다. 논제의 예를 들면 △과학기술진흥 통치자의 확고한 신념절실 △구호만으로는 과학기술발전 어려워 △과학기술정책 흔들려서는 안된다.

△성군(聖君)은 역사의 교훈을 잘 받아들인다는 등이다.

다섯째는 행정조직의 개선을 제언한 것이며 40회의 제언기회중 31회로 약 78%를 보였다.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조직체계가 비능률적이고 합리성의 결여 그리고 과기처의 위상격상 등이 제언되었다. 이의 논제의 예를 들면 △국가과학 기술체계의 혁신 △기술지원체계의 재정비 시급 △합리적인 과학기술체계와 제도 △알찬 과학기술체제 갖추자 △과기처의 종합조정능력제고 절실 △과학기술인의 중용을 제안한다는 등이다.

여섯째는 산·학·연의 협력 및 실험실습을 강조한 제언이며 이것도 비교적 비중이 높았다. 과학기술계 교육기관의 실험실습비 및 연구비 그리고 산학협동기금의 빈약도 문제이며 실험실습을 경시하고 심지어는 기피하는 풍토가 짙은 가운데 대학의 학제에서도 강의는 1시간 1학점에 실험실습은 2시간에 1학점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다. 한편 논제의 예를 들면 △실험실습의 철저 △실험중시해야 △산학연의 협력강조 등이다.

大選공약 꼭 完遂해야

그밖에 과학기술인 스스로의 제언으로 과학기술창달이 곧 국가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과학기술인이 더 헌충 연구와 자질향상에 노력해야한다는 호소와 과학기술인의 대동단결을 다짐하자는 글도 여러번 게재되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의 활성화, 과학기술개발정책의 일관성 등을 강도 높게 제언한 글도 적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의 제기는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국가차원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과학기술발전 중·장기계획이 전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전문인들의 식견을 모은 총집결 합의체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여 이를 통치자의 대선공약의 실천으로 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가 틀림 없는 과학기술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되기를 재삼 기대하는 바이다.